12-28 (통권 제 499호)
2012. 8. 3.

지속가능 성장을 위한

경제주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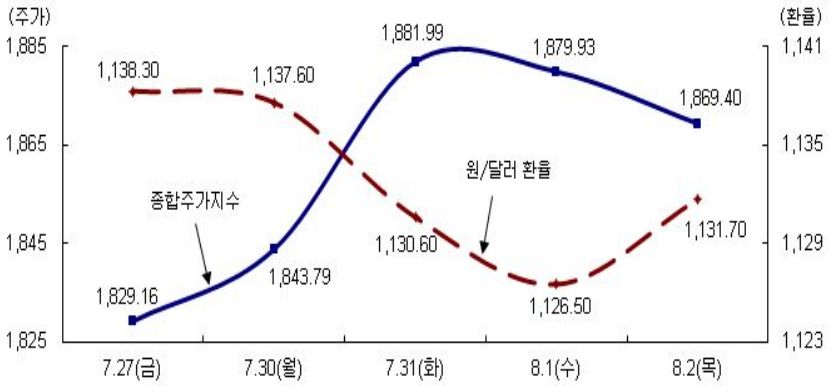
Weekly Economic Review

●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
–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요구

현대경제연구원

Better than the Best!

週間 主要 經濟 指標 (7.27~8.2)



주가	환율	금리	유가
40.20	-6.60	-0.07	-0.33
1,869.40 (종합주가지수)	1,131.70 (원/달러)	2.79 (국고채 3년물)	101.73달러 (두바이油)

차 례

주요 경제 현안 1

□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 1

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

□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.
□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총 괄 :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(2072-6210, bkyoo@hri.co.kr)
□ 작 성 : 김 동 열 수석 연구위원 (2072-6213, dykim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□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

○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3.8%까지 하락하고, 재정위기의 지속과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
-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우려에 따라,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봄

○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: 성장과 일자리 창출

- **이와 같은 저성장시대의 진입을 앞두고, 우리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에게 '복지'보다 '성장', '경제민주화'보다 '일자리 창출'을 더 요구하고 있음**
  - 대선 후보들이 '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'을 둬야 하나?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'성장과 복지의 균형'(44.3%), '선성장, 후복지'(41.9%), '선복지, 후성장'(13.7%)의 순으로 응답하여, '성장'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
  - 대선 후보들이 '어떤 정책에 중점'을 둬야 하나?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'물가 안정'(36.0%), '일자리 창출'(32.3%)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, '경제민주화'(12.8%)와 '복지 확대'(6.7%)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음
- **국민들은 '4% 이상의 높은 성장'을 원하고 있으며, '서비스업'보다는 '제조업'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남**
  - '우리 경제의 적정성장률'에 대해 국민들은 '최소 4% 이상의 성장'(48.1%), '3% 대의 성장'(40.2%), '5% 이상의 고성장'(11.6%)의 順으로 응답하여 '4% 이상의 높은 성장'을 59.7%가 지지함
  - 미래 유망산업에 대해 '바이오, 나노 등 신생제조업'(40.0%), '車, 전자 등 전통제조업'(26.1%), '문화, 관광 등 전통서비스업'(19.6%), '의료, 법률 등 지식서비스업'(14.3%)의 順으로 응답. '제조업'(66.1%)이 서비스업(33.9%)을 압도함
- **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'선거용'이라는 평가가 많으며, '복지를 위한 증세'에도 호의적이지 않음**
  -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'선거용'(78.1%)이라는 응답이 '꼭 필요한 공약'(21.9%)이라는 응답보다 약 4배가량 높게 나타남
  - 복지 재원의 마련에 대해 '탈세 예방'(49.4%), '부자 증세'(31.1%), '다른 예산 절감'(10.7%), '복지세 신설'(8.8%)의 順으로 응답하여, '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'(39.9%)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

○ 시사점

-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차기 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대책이 시급하며, 단기적으로는 청년, 여성,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함

1.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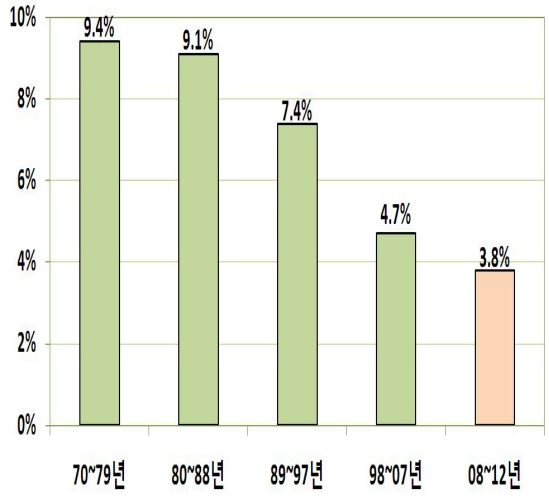
○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3.8%로 떨어지고,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라, 우리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음

- 4~5%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.8%로 하락[1]했으며,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% 내외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
  -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%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의 월별 증가율도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급락함

○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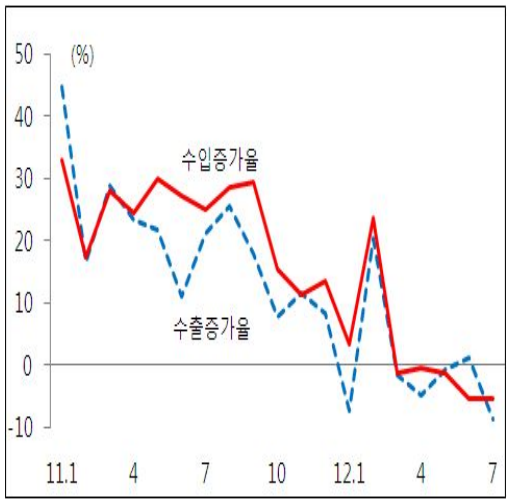
-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
  - 이에 따라,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,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

<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이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.
주 : HP필터링을 이용.

<수출입 증가율의 하락 추이>



자료 : 무역협회, 지식경제부.
주 :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. 7월은 잠정치

1) 현대경제연구원, '잠재성장률의 위기', 경제주평 12-03(통권 제474호), 2012.1.20.

2.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: 성장과 일자리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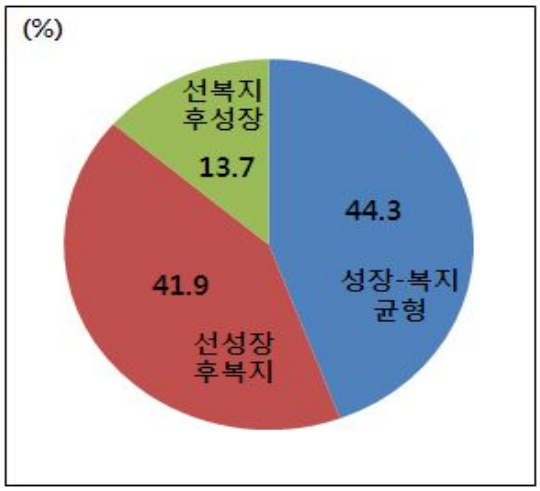
○ 국내외 불안요인의 지속과 저성장시대로의 진입에 직면하여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이 '성장'과 '일자리 창출'에 두어져야 한다고 응답[2)]

(1) 국민들은 '복지'보다 '성장'에, '경제민주화'보다 '일자리 창출'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음

○ (성장에 대한 관심) 대선 후보들이 '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디에 중점'을 둬야 하나?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'성장과 복지의 균형'(44.3%), '선성장, 후복지'(41.9%), '선복지, 후성장'(13.7%)의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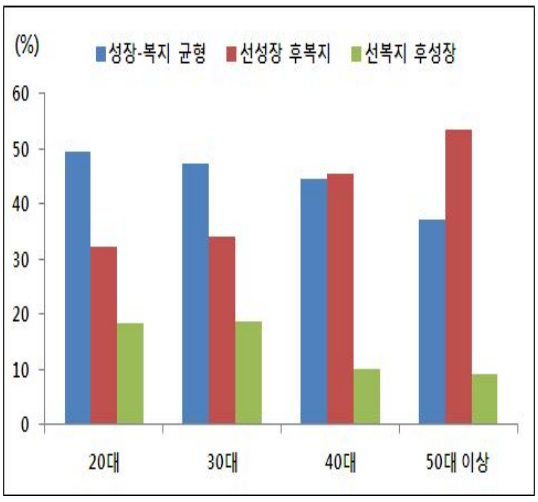
- '성장과 복지의 균형'(44.3%)을 제외하고 보면, '선성장, 후복지'(41.9%)가 '선복지, 후성장'(13.7%)에 비해 훨씬 많은 응답을 보여 **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 따라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**고 판단됨
  · 연령별로 보면, **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'선성장, 후복지'**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**20대와 30대는 '성장-복지 균형', '선성장, 후복지'**, '선복지, 후성장'의 順으로 응답

<차기정부의 성장-복지 우선 순위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연령대별 성장-복지 선택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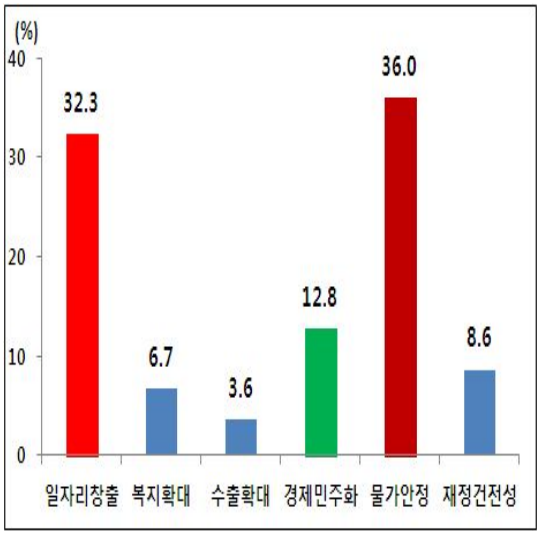
2) 현대경제연구원은 '차기정부의 정책방향'과 관련하여, 지난 7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, 전국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1,011명을 대상으로,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(오차범위는 95% 신뢰수준에서 ± 3.08).

· 직업별로 보면, 블루칼라, 자영업, 전업주부,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에 '선성장, 후복지'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학생과 화이트칼라는 '성장-복지 균형'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게 나타남
·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'선성장, 후복지'에 대한 응답 비율이 커지고 있으며, 자산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'선성장, 후복지'에 대한 응답이 '성장-복지 균형'에 대한 응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음

○ **(물가와 일자리) 대선 후보들이 '어떤 정책에 중점'을 둬야 하나?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'물가 안정'(36.0%), '일자리 창출'(32.3%)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, '경제민주화'(12.8%)와 '복지 확대'(6.7%)는 기대보다 많지 않았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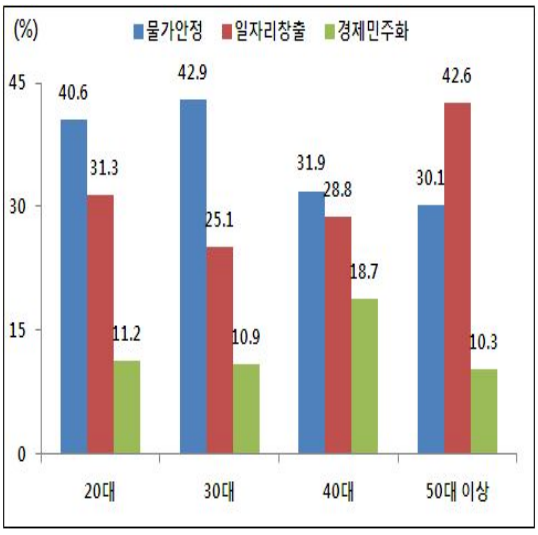
- 국민들은 실질 소득과 연계되는 **'물가 안정'(36.0%)**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, 소득의 근원인 **'일자리 창출'(32.3%)**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
·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**'경제민주화'(12.8%)**와 '복지 확대'(6.7%)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
· **'물가 안정'(36.0%)**에 대한 요구는 **20대와 30대의 젊은 층**, 대도시 지역,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이 적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
· '일자리 창출'(32.3%)에 대한 요구는 **50대 이상과 20대, 자영업자,** 서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,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대책이 시급함

<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연령대별 정책 우선순위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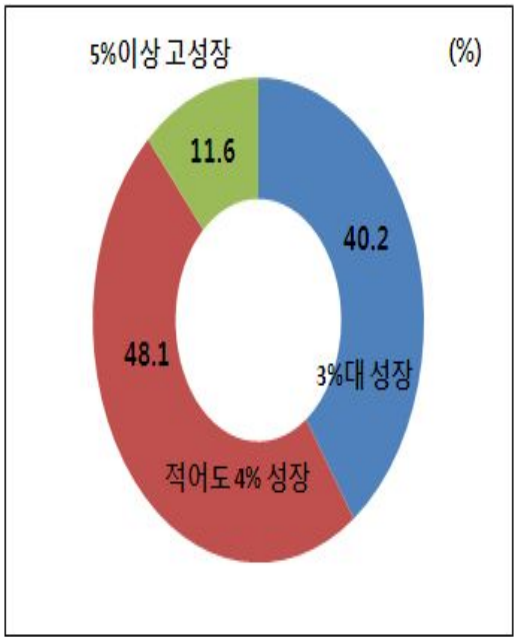
· '경제민주화'(12.8%)에 대한 요구는 **40대, 화이트칼라,** 대졸 이상, 월 소득 300만원~500만원의 고소득층,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· '복지 확대'(6.7%)에 대한 요구는 **20대와 30대, 화이트칼라,** 저소득층, 대졸 이상,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(2) 국민들은 여전히 '4% 이상의 높은 성장'과 '제조업'에 희망을 걸고 있음

○ **(4% 이상 성장) 과거 4~5%의 성장에 비해 올해는 3.5%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데,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적정한가? 라는 질문에 대해 '최소 4% 이상'(48.1%), '3%대 성장'(40.2%), '5%이상 고성장'(11.6%)의 順으로 응답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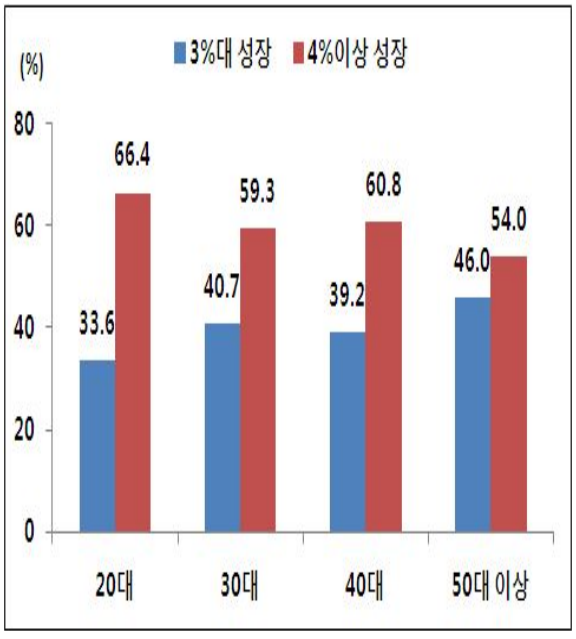
- **응답자의 60%정도가 '4% 이상의 성장'이 적정하다고 답**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을 희망하고 있으며, 20대 **젊은 층일수록 고성장을 선호**함
· **'4% 이상 성장'(59.7%)**에 대한 요구는 **20대, 미혼, 학생,** 화이트칼라, 월 300-500만 원 소득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았음
· **'3% 대의 성장'(40.2%)**에 대한 요구는 **50대 이상,** 기혼, 블루칼라, 고소득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았음

<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성장률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연령대별 적정성장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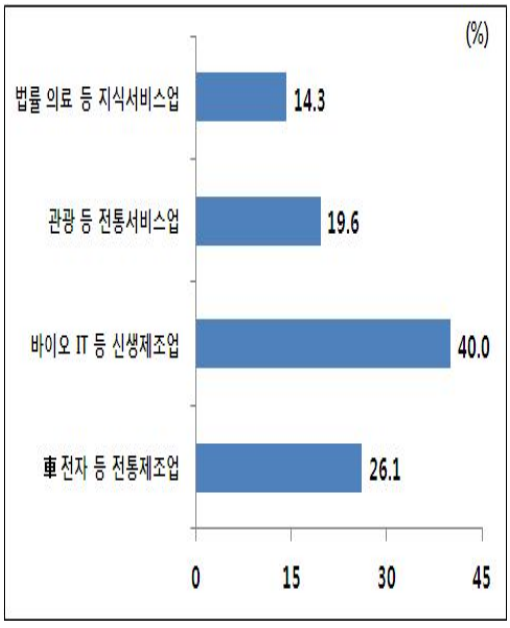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**(제조업 중시)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'유망한 산업'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? 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'제조업'(66.1%), '서비스업'(33.9%)의 順으로 응답하여, 제조업에 대한 기대가 서비스업보다 약2배가량 높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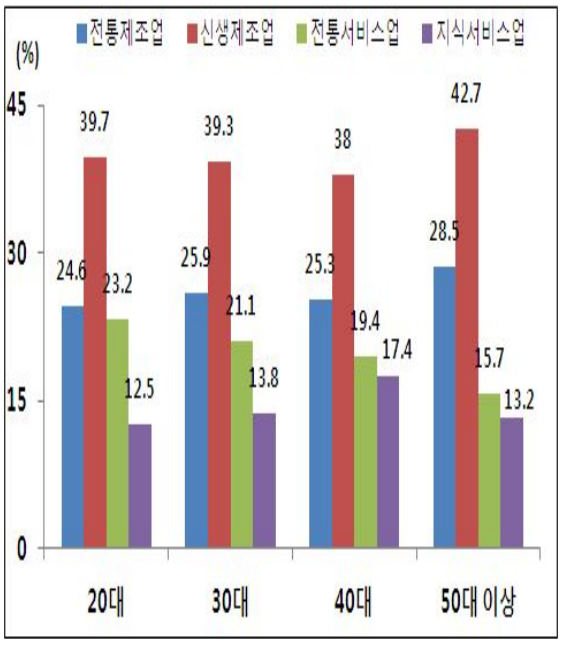
- 미래의 유망산업에 대해서 국민들은 **'바이오, 나노 등 신생 제조업'(40.0%), '자동차, 전자 등 전통 제조업'(26.1%), '문화, 관광 등 전통 서비스업'(19.6%), '의료, 법률 등 지식 서비스업'(14.3%)의 順으로 응답**
  - '바이오 나노 등 신생 제조업'(40.0%)에 대한 기대는 50대 이상, 화이트칼라, 자영업자,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
  - '자동차, 전자 등 전통 제조업'(26.1%)에 대한 기대는 50대 이상, 블루칼라, 자영업자, 전업주부, 저소득층, 고졸에서 높았음
  - '문화, 관광 등 전통 서비스업'(19.6%)에 대한 기대는 20대와 30대, 학생, 대졸, 자산 규모가 작은 계층에서 높았음
  - '의료, 법률 등 지식 서비스업'(14.3%)에 대한 기대는 40대, 화이트칼라, 전업주부, 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높았음
  -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강하며, 20대~40대는 50대 이상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가 소폭 높게 나타남

<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유망산업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연령대별 미래 유망산업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(3) 복지공약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, 복지재원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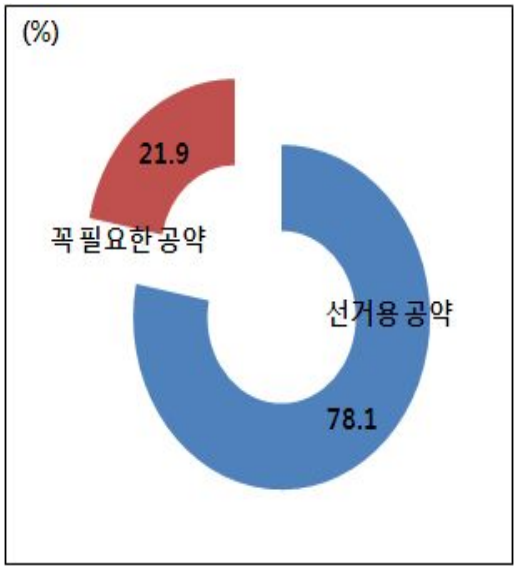
○ **(복지 공약) 대선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 공약에 대해 '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'(78.1%)이라는 응답이 '복지 수준이 낮아서 나온 꼭 필요한 공약'(21.9%)이라는 응답보다 약4배가량 높게 나타남**

- 대선후보들의 복지 공약에 대해 '선거용'(78.1%)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, 국민들이 복지공약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
  - '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'(78.1%)이라는 응답은 40대와 50대 이상, 기혼, 자영업자, 전업주부, 고졸, 5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 높게 나타남
  - '복지수준이 낮아서 나온 꼭 필요한 공약'(21.9%)이라는 응답은 20대와 30대, 미혼, 학생, 블루칼라, 화이트칼라, 대졸, 고소득자의 경우에 높게 나타남

○ **(복지 재원)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 마련은'탈세 예방'(49.4%), '부자 증세'(31.1%), '다른 예산 절감'(10.7%), '복지세 신설'(8.8%)의 順으로 응답하여, 복지를 위한 증세(39.9%)에 호의적이지 않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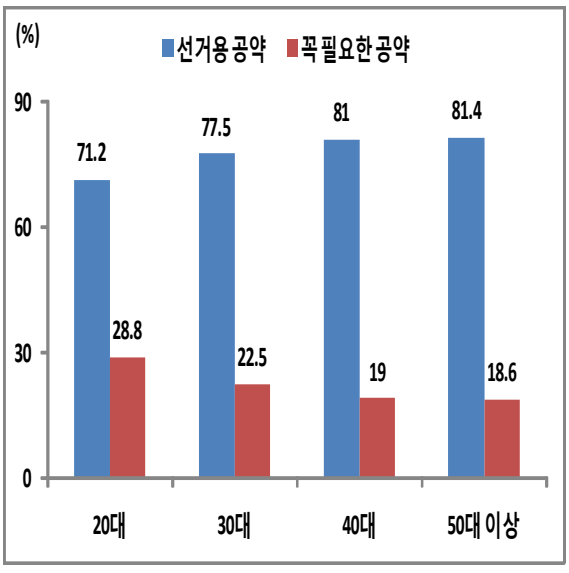
- 세율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 '탈세 예방'(49.4%), '다른 예산 절감'(10.7%) 등에 대한 지지가 60.1%로 높았음.

<대선후보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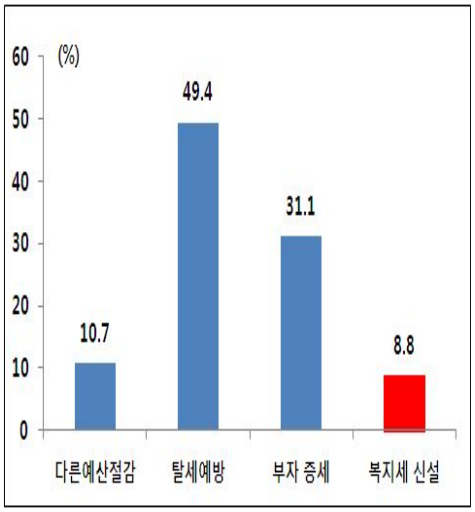
<연령대별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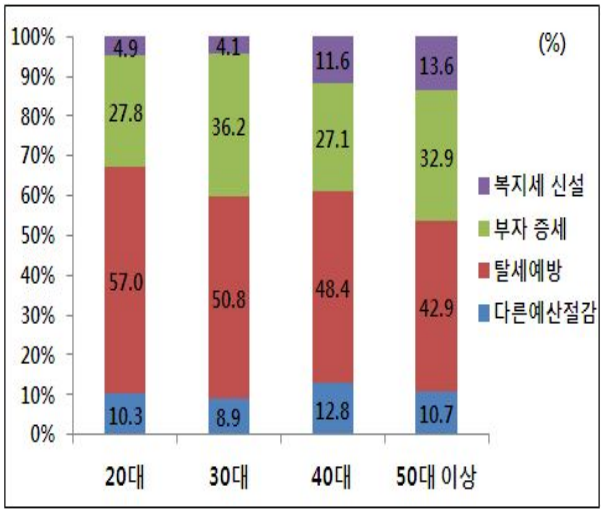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- 다른 예산의 절감, 탈세 방지 등 **정부의 책임**이 **60.1%**, **부자들의 희생**이 **31.1%**임에 비하여, **국민들 전체의 부담은 8.8%**에 불과
  - **'탈세 예방'(49.4%)**에 대한 응답은 20대와 30대, **화이트칼라, 학생,** 전업주부, **대졸,**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
  - **'부자 증세'(31.1%)**에 대한 응답은 30대와 50대 이상, **블루칼라, 전업주부, 월 100만 이상 ~ 300만 원 이하 상대적 저소득자**의 경우에 높았음
  - **'복지세 신설'(8.8%)에 대한 응답은 40대와 50대 이상, 자영업자, 월 500만 이상 고소득자**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음

<복지 재원에 대한 지지>



<연령대별 복지 재원에 대한 지지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(4) '물가 상승'과 '자녀 교육비' 부담이 살림살이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

- **가계 살림살이에 가장 큰 부담요인은 '물가 상승'(50.3%), '자녀 교육비'(21.8%), '가계 부채'(11.4%), '일자리 불안'(10.6%), '전월세 부담'(5.8%)의 順으로 답변하여, 물가 상승과 자녀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함**
  - 응답자 2명 중 1명(50.3%)은 '물가 상승'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가 살림살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
  - 기타 지출 가운데 '자녀 교육비 부담'(21.8%)이 '부채 상환의 부담'(11.4%)이나 '주거비 부담'(5.8%)에 비해 가장 무겁다고 응답함

3. 시사점

○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'복지'보다는 '성장' 쪽에, '경제민주화'보다는 '물가 안정'과 '일자리 창출' 쪽에 맞춰지기를 바라고 있음

-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에 따라 우리 수출 증가율도 최근 급락하는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이 '성장'과 '일자리'에 맞춰지기를 희망함
  ·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 규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

○ 3%대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게 될 차기정부의 정책은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에 맞춰져야 함

- 차기정부에서는 갈수록 낮아지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다시 되살리고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
  · 단기적으로는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층과 여성,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, 고용률을 제고함은 물론 청년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
  · 50세 이후의 근로자들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,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실시
  · 국민들의 80% 가량이 복지 공약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,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은 실현가능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

- 바이오 나노 등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
  · 우리 경제의 강점을 살리고 국민들의 지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, 자동차 전자 등 전통제조업은 물론 바이오 나노 등 新성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함

김동열 수석연구위원 (2072-6213, dykim@hri.co.kr)

<참고> '국민들이 바라는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' 설문 문항

구분	질문	답변
주요 정책 방향	① 대선 후보들이 중점을 둬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	(1)일자리 창출 (2)복지 확대 (3)수출 확대 (4)경제 민주화 (5)물가 안정 (6)재정 건전성
성장-복지 우선 순위	②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경제 성장과 복지 둘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	(1)선성장 후복지 (2)성장-복지 균형 (3)선복지 후성장
적정 성장률	③ 올해 성장률이 3.5퍼센트 정도로 하락할 전망. 성장률이 얼마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?	(1)3%대 성장 (2)적어도 4% (3)5% 이상 고성장
유망 산업	④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망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	(1)전통 제조업(車, 전자) (2)신생 제조업(바이오) (3)전통 서비스업(관광) (4)지식 서비스업(의료)
복지공약 신뢰성	⑤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	(1)선거용 (2)꼭 필요한 공약
복지재원 마련 방안	⑥ 복지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	(1)다른 예산 절감 (2)탈세 예방 (3)부자 증세 (4)복지세 신설
살림살이 만족도	⑦ 귀하의 소득과 살림살이에 대해 만족하시나요?	(1)매우 만족 (2)만족 (3)보통 (4)불만 (5)매우 불만
살림살이 애로요인	⑧ 가계 살림살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?	(1)가계부채 (2)일자리 불안 (3)전월세 부담 (4)자녀 교육비 (5)물가 상승
살림살이 개선대책	⑨ 귀하의 가계 살림이 나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하나요?	(1)경기 활성화 (2)주택가격 회복 (3)가계 빚 감소 (4)일자리 안정 (5)교육비 부담 완화 (6)물가 안정

주요 국내외 경제지표

□ 주요국 성장률 추이

구분	2010년					2011					2012년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(E)
미국	3.0	3.9	3.7	2.5	2.3	1.7	0.4	1.3	1.8	3.0	2.0
유로 지역	1.9	0.4	1.0	0.4	0.3	1.4	0.8	0.2	0.2	-0.3	-0.3
일본	4.4	6.1	5.2	2.3	-0.6	-0.9	-6.8	-1.5	7.0	-2.3	2.4
중국	10.3	11.9	11.1	10.6	9.8	9.2	9.7	9.5	9.1	8.9	8.0

주: 1)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7월 기준임.
2) 미국,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, EU는 전기대비,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.

□ 국제 금융 지표

구분		2010년말	2011년		2012년		
			6월말	12월말	7월 27일	8월 2일	전주비
해외	미국 10년물 국채 금리(%)	3.30	3.16	1.88	1.55	1.56	0.01%p
	엔/달러	81.19	80.66	77.66	78.26	78.41	0.15￥
	달러/유로	1.3350	1.4492	1.2955	1.2280	1.2237	-0.0043$
	다우존스지수(p)	11,578	12,414	12,218	13,076	12,879	-197p
	닛케이지수(p)	10,229	9,817	8,455	8,567	8,653	86p
국내	국고채 3년물 금리(%)	3.38	3.76	3.34	2.86	2.79	-0.07%p
	원/달러(원)	1,134.8	1,067.7	1,151.8	1,138.3	1,131.7	-6.6원
	코스피지수(p)	2,051.0	2,100.7	1,825.7	1,829.2	1,869.4	40.2p

□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

구분		2010년말	2011년		2012년		
			6월말	12월말	7월 27일	8월 2일	전주비
국제 유가	WTI	91.40	95.18	99.22	90.18	87.14	-3.04$
	Dubai	88.80	106.75	104.89	102.06	101.73	-0.33$
CRB선물지수		332.80	338.05	305.30	299.60	294.50	-5.10p

1) CRB지수는 CRB(Commodity Research Bureau)사가 곡물, 원유, 산업용원자재,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.

□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

구 분		2010	2011			2012(F)		
		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국민계정	경제성장률 (%)	6.3	3.8	3.4	3.6	2.9	3.9	3.5
	민간소비 (%)	4.4	2.9	1.6	2.3	1.7	3.3	2.5
	건설투자 (%)	-3.7	-7.1	-3.0	-5.0	1.9	2.4	2.1
	설비투자 (%)	25.7	8.9	-1.1	3.7	6.0	6.7	6.3
대외거래	경상수지 (억 달러)	294	81	184	265	55	75	130
	무역수지 (억 달러)	412	153	155	308	80	116	196
	수 출 (억 달러)	4,664	2,736	2,816	5,552	2,752	3,047	5,799
	(증가율, %)	28.3	23.6	14.9	19.0	0.6	8.2	4.5
	수 입 (억 달러)	4,252	2,582	2,662	5,244	2,672	2,931	5,603
	(증가율, %)	31.6	26.7	20.2	23.3	3.5	10.1	6.9
소비자물가 (평균, %)		3.0	3.9	4.1	4.0	2.8	3.0	2.9
실업률 (평균, %)		3.7	3.8	3.0	3.4	3.5	3.1	3.3
원/달러 환율 (평균, 원)		1,156	1,102	1,114	1,108	1,140	1,110	1,125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